

Juhun Lee

Professor Hyejin Kim

Translation Practicum

13 March 2024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인 의사들... 집단 파업, 그 다음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천 명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현 의대 정원에 2/3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13,000명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가운데 9,000여명이 병원을 떠난지 2주 가량이 지난 가운데, 의사 파업 사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 전공의 파업, 현재 상황은?

전공의 파업으로 전국에서 수백 건의 진료 및 수술이 취소되자, 정부는 해당 의사들에게 2월 29일까지 진료를 재개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미북귀 시 의사면허 정지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에도 상당수는 명령에 불응했다.

지난 26일, 정부는 대형 병원 50여 군데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공의 파업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함과 동시에 제재 전에 진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지침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미북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문의 자격 획득에 1년 가량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이후 취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행정 처분에는 적어도 몇 주는 필요하다”며, “전공의들과의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덕 법무법인 대륜 소속 의료전문변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9,000명 모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파업을 주도한 의사 대표 약 100명을 대상으로만 행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6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침을 교수들과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법적 제재에 직면한 전공의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탄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복지부가 경찰에 해당 의사를 고발하고, 이어 검찰에 기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검·경에 소환 조사를 받는 의사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지도부 5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차갑게 식은 여론 반응

한편 전공의 파업에 대한 여론 반응은 차갑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약 80%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증원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사 측은 급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결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맞섰다. 이미 연봉 최상위층에 위치한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잇달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연하(40)씨는 “전공의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의사들이 한국에서 더는 의사 생활을 못 하겠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다른 서울 시민 신서니씨는 “현행 의료 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료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임금이나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신씨는 “필수 의료 인력이 의료 소송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씌운 ‘직무를 유기한 특권층’이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